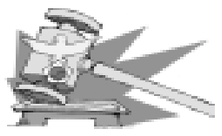
유령‘ 홍제동 분실 ’ 행정자치부령 위반

99년 직제폐지 불구 대국민 감시 활동 경찰“ 국회·행정수반 양해 사안 ”항변



얼굴없는 보안4과

영화 <여고괴담>을 보면 학교를 배회하는귀신얘기가나온다. 원혼이된학생이몇년째다른학생들속에섞여같은교실같은자리에서수업을듣는다. 그런데영화에서나가능할 것 같은 일이 경찰에서 버젓이 일어나고있다.

공식적으로는6년전세상을떠난원혼이 지금도 경찰청에 자리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 태극기만보면감동에겨워눈물을흘린다 ”는이귀신은“ 한국사회를전복하려는 좌익사범 ”을 잡기 위해 길거리를 배회한다. 시중에서유통되는책을감정하고인터넷을 뒤지고 의심스런 사람들을 잡아들여 한 때 잘나가던필살기인‘ 빨간딱지붙이기 ’를날린다. 이귀신의이름은바로‘ 경찰청보안국 보안4과 ’다.

법령에는 없는데

공식적으로 1999년 5월 24일 보안3과에 통합되면서 폐지된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가 지금까지도 폐쇄되지 않고 활동중인 것으로밝혀져파문이예상된다.

문제는 직제에도 없는 보안4과가 국가보안을무기삼아국민들을일상적으로감시하고시민들을연행해구속영장을청구한다는 것이다. 이는행정법치주의와행정공개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각에서는“ 보안4과 명의로 된 구속영장 자체가 무효 ”라는주장도나온다.

“ 법령 규정에도 없는 보안국 보안4과는 명백히비밀경찰이활동하는것입니다. 비밀법령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비밀법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법령에 없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라고 봐야 합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조직이 법률적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무효입니다. 보안4과에서 나온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도 귀신이 청구한 것과 마찬가지로무효입니다.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주먹구구식 행정, 행정편의주의, 비밀주의의전형 ”이라며“ 국가기관은아무리말단이라도 법령에 근거를 해야 하는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 ”고 보안4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가령 보안3과 명의로했다면모르겠지만보안4과명의로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국가예산을 쓴다는것은말도 안되는일 ”이라고밝혔다. 그는“ 경찰청이지난6년동안 국회와국민에게 사기를친 것 ”이라고꼬집었다.

흔히‘ 홍제동 분실 로 불리는 보안4과는 1999년이후에도 도서감정과 내사 ·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보안4과는‘ 주요 좌익사범 수사 를 담당하는 부서였다. 이들의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에는 보안4과 직인이 찍혀 있다. 보안4과는 정부예산으로 관서운영비와 보안수사장비 구입비 등을 쓰고 있다. 보안4과는 지난해 공안사범 2명을 구속했다. 경찰청보안국의올해예산은약 85억원에이른다.

“ 경찰청에서 보안4과를 운영하려면 직제시행규칙을 고치는 게 맞습니다. 국민들이 보는 조직과 내부 운영 조직이 다르면 행자부에서 문제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김하균 행정자치부 조직기획팀 서기관은“ 보안4과가 계속 유지되는 것은 행정공개주의 원칙에 입각해 문제 소지가있다 ”고말했다.

1998년 2월 28일자로 과 설치는 기관장 자율사항이 되었다. 과를 만들고 안 만들고는 기관장이 알아서 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과를 만들더라도 추후 직제규칙을 바꿔야 한다.

경찰청 법무과 관계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조직과 운영하는 조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며“ 직제상없는데사실상운영을하는 것은 보안국에서 필요에의해 운영하는 것 ”이라고말한다.

그는 그러면서도“ 직제를 고치는게 맞긴하다 며“ 행자부 승인 받아야 하고, 기획예산처예산배정해야하고, 그런부서와협의를해야한다 ”고변명했다. 그는계속된질문에“ 답변하기곤란하다 " 잘모르겠다 며답변을회피했다.

경찰청은“ 행자부승인이금방되는게아니다 ”고변명하지만설령보안4과를폐지했다가 조직상 필요 때문에 다시 만들었다 해도6년이란시간은직제규칙을바꾸기에충분하고도남는다. 비슷한경우로공안문제연구소를들수있다.

※침대, 의자, 책상은 나사못으로 고정.

김용찬씨가 기억을 바탕으로 그린 홍제동 보안4과 신문실 내부 구조. 경찰청 보안국 200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홍제동에 있는 보안4과 청사는 1988년 10월 준공됐다. 대지 5천1백96평 건평 1천5백93평 4층 건물로 신문실 40개가 있다.

지난해 경찰청은 공안문제연구소를 치안연구소로 통합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안문제연구소는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 직제개정을 해야 하는데 직제 개정안이 행자부에 계류중 ”이라는이유때문이다.

이 문제는 지난 18일 본지와 인권실천시민연대가 공동주최한 경찰개혁토론회에서도제기됐다. 이에대해경찰측토론자로나온 유동열 공안문제연구소 연구관은“ 엄밀하게따져직제에 없는운영은 잘못 ”이라며“ 인정한다 ”고밝혔다.

법 위에 대통령?

그는이어“ 위법은아니고행자부령을어긴 것 ”이라며“ 보안4과 존재를철저히 숨겼으면 문제가 되지만 국정감사에서 국회에 존재를 알리고 예산 승인도 받았기 때문에 국회에서도양해한사안 ”이라고주장했다.

유연구관은이와함께“ 1999년당시경찰청 경영진단 결과 상부단위가 너무 많다고해서 보안 3과와 4과를 통합하도록 직제를바꿨다 며“ 당시업무중요성때문에경찰보다 상급 차원, 행정수반의 양해를 얻어 4과를운영하고있는것 ”이라고말했다.

강국진기자 globalngo@ngotimes.net

■보안경찰 역사

건국이후이승만정권은경찰조직을내무부산하치안국으로편제했다. 공안업무는치안국사찰과가맡았다. 사찰과는1950년정보수사과로, 1953년 특수정보과로 개칭되면서확대운영되게됐다. 애초정보, 외사임무를주로하던사찰과는확대개편이후정치, 문화사찰도가능해졌다.

특수정보과는4 · 19혁명 이후 대공분야로범위가축소되고 명칭도정보과로 바뀌었다. 5 · 16 쿠데타 이후 1963년‘ 기타 반국가적범죄의수사와지도에관한사항 ’이 처음으로 부여됐고 1966년에는 외사업무가없어졌다. 사람들이흔히생각하는보안경찰은이때정립되기시작했다.

1974년 12월정부조직법개정에따라내무부 치안국은 치안본부로 개편된다. 치안본부3과에속하게된정보과는1976년4월 정보1과와 2과로 분리됐다. 국가보안법 관련대공업무는2과에서담당했다.

제5공화국이 등장하면서 보안경찰의 부서와업무는크게늘어났다. 1981년6월신설된 치안본부 4과 산하에 정보1,2,3과와 대공과가 들어섰다. 기존 대공업무는 대공과에서 단독으로 담당하고 정보2,3과는 각각 정치 · 경제 · 사회 분야와 학원 · 문화분야사찰을맡았다.

1986년1월에는정보과가정보부로승격되면서정보1부와 2부 안에 각각 정보1, 2, 3과와 4, 5과가 생기고 신설된 대공부에는 대공1, 2과와 대공수사과가 포함됐다. 5개월뒤에는대공1, 2, 3부로확대됐다. 대공1부에는 대공3과가 신설됐고 대공2부에는 대공수사 1, 2, 3과, 대공3부에는 대공수사 4, 5, 6과가 설치됐다. 노태우 정권 당시인 1989년 대공수사3과와 대공6과는 폐지됐다. 1991년 5월 치안본부가 내무부 외청인 경찰청으로 개편되면서 대공부는 경찰청 보안국이되었고기존7개과도보안1~5과로 축소됐다. 이후 1994년에는 보안5과가 폐지됐고 1999년 5월에는 보안4과도 공식적으로는 폐지됐다. 조직이 축소되면서 인원도공식적으로는점차감소했다.

1995년 4천4백85명이던 보안인원은 2000년 3천3백47명을 거쳐 2004년에는 8월 기준으로2천6백19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80년대보안경찰의업무는지금도그대로이어지고있다.

강국진기자 globalngo@ngotimes.net

“ 너 간첩 아니냐 ”

■김용찬씨가 겪은 홍제동 보안4과

김용찬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는대학졸업을앞두고취업준비를하던지난 2003년7월 11일집앞약국에서국가보안법위반으로연행됐다. 그전에는파출소에서 조사받은적도 없었던김씨를데려간 곳은바로보안4과청사, 이른바홍제동보안분실이었다. 그는2002년당시 철거반대투쟁에 관여하면서 조직을 만들어 활동한 적은있었지만검거당시는활동을모두접은상태였다고한다.

증거는 없고 자백만

“ 처음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신문실에 들어가니 자술서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수사관 2명이 번갈아 들어왔는데 젊은 수사관은 고함치면서 윽박지르고 나이든 수사관은 달래더군요. 젊은 사람은‘ 다 알고 있다. 너는 쓰기만 해라. 책 무얼 읽고, 누구한테학습받았는지, 어느집회에 참석했는지쓰라 ’고말했습니다. 나이든사람은 담배도 주면서‘ 빨리 진술하면 바로 나갈 수도 있다. 요즘 세상에 누가 이런 일로 구속하겠느냐 ’라고 하구요. ”김씨는 자술서쓰기를거부했다.

그다음날부터보안수사관들은아침8시경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홍제동으로 김씨를 데려가 조사하다가 밤 11시~12시쯤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에 데려다주기를 되풀이했다. 구속영장에는 그가 2003년 7월 11일 23시 40분서대문경찰서유치장에 구금했고7월 16일경찰청보안4과에인치했다고돼있다.

“ <범죄사실증명>이라는5권 분량의 책이있더라구요. 내수사기록을정리한책자였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인터넷에 게재한 글과댓글까지들어있었어요. 압수한책내용중형광펜으로밑줄친부분을보여주면서‘ 이 내용에 동의하느냐 는 식으로 같은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심지어는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보여주면서 통화이유까지 꼬치꼬치 캐물었구요. 나중에는 수사관들이말하는내행적과 생각이 진짜인것같은착각이들더라구요. 2001년부터 2003년까지내가어느날무얼했는지도다 알게될정도였습니다. ”

구속적부심은 7월 16일에 있었다. 김씨는 그 이후 5일 동안 또 조사받았다.“ 신문실에서는 검찰송치용으로 조서 쓰는 것이라고하더라구요. ”검찰조사받으러가보니 <범죄사실증명>은11권으로늘어나 있었다. 구속영장에는“ 구속치않으면증거인멸 후도망하여소위사회주의혁명을위한각종투쟁을 선전선동하거나 할 가능성이 매우높다 ”고되어있다.

김씨는 연행 당시 국가보안법 7조 1 · 3 · 5항 위반이었는데 기소될 때는 3항이 빠졌다. 7조1항은찬양고무위반혐의, 3항은 이적단체 구성 · 가입 혐의, 5항은 이적표현물소지혐의에관한것이다.

김씨는“ 그들이 처음에는 조직사건으로 묶으려고하다가 무리가 따르니까결국단체구성죄를뺐다 며“ 무리한구속수사라는 것을스스로자인한셈 ”이라고꼬집었다.

2003년9월2일보석으로풀려난김씨는 그해 11월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김용찬씨는노무현정권출범이후 첫번째구속자이다.

“ 국보법적용이민감한시기라는걸감안해파장이 적으면서눈에 안띄게구속시킬 만한 사람으로나를고른게아닐까생각합니다. 나는한총련간부도아니고전국조직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첫단추로 만만하지않았을까요. ”

김씨는 지금도 자신이 조사받았던 홍제동분실 내부구조를 또렷이 기억한다.“ 4층 건물이었어요. 1층은면회실을비롯해잡다한것이있었고2층과3층은구조가같았습니다. ㄴ자구조였고한층에신문실로쓰는 방이 32개 있었어요. 나는 3층에서 조사를 받았죠. 창문이하나있지만바깥은시멘트로 막아놔서대낮에도 형광등을켜야했어요. 벽은가수들음악연습하는곳처럼구멍이여기저기뚫려있는방음벽이었구요. 시계도없어서시간을제대로알수없더라구요. ”

김씨는“ 방에 들어가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고한다.“ 수사관들은‘ 재소자편의를 위해 화장실, 변기, 세면대를 설치했다 ’고하지만 방에 들어가는 순간 고문용이라고 느꼈습니다. 변기 앞에 1m 높이 칸막이가 있는데수사관이 늘지켜보고 있어 용변도 맘편하게볼수없었구요. ”

김씨는수사를받으면서“ 수사관들이너무나무식하다는점 ”과“ 정말하는일없는 조직이라는점 ”이무척놀라웠다고말한다.

“ 한건하고반년쉬는곳이라는게눈에 보이더라구요. 이런 사람들에게 국민의 혈세를낭비한다는게너무화가났습니다. 조사받을당시에도방 32개가운데2개 빼고는모두비어있었거든요. 의경이우리가조사받던방앞에만지키고서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사건끝나면어디가서놀까 ’하는얘기를하는것도들었습니다. 기본지식도전혀 없고 운동노선이어떻게 다른지도모르구요. ”

“ 하는 일도 없더라 ”

“ 한수사관이나에게‘ 너간첩아니냐 ’고 물은적이있다 ”는김씨는“ 내가간첩이아니라는걸그사람이더잘알것 ”이라고말한다.“ 보안부서에서일하는젊은수사관들에게이런말을해주고싶습니다. 나중에아이가 자라서‘ 아빠 직업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뭐라고대답할건가궁금합니다. 아이들이사실을알게되면뒷감당을어떻게할지궁금합니다. ”

강국진기자 globalngo@ngotimes.net